

2014. 4. 19. 시행 국가직 9급공무원 사회 시험 총평

장혁 교수

올해는 공무원 시험제도 개선에 따른 2번째 연도이므로 아무래도 작년도 출제의 보완 과정을 거쳐 출제될 것이라는 관측을 하였습니다. 때문인지는 몰라도 올해 출제된 문제는 대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의 난도를 유지하였고, 지엽적인 문제 또한 없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라면 기본이론부터 문제풀이까지 차분하게 준비하신 수험생들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으셨으리라 짐작합니다.

각 파트별로 분석을 해보면 법과정치 각 5문항씩 10문항, 경제 5문항, 사회·문화 5문항 씩 적절하게 안분되어 출제되었으며, 범위에 있어서는 8차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30% 정도 혼합하여 출제되어 기본서 학습을 충분히 하신 분들에게 상당히 유리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특히 사회·문화 파트에서 표분석 문제는 유사문제를 접해보지 않은 수험생들이나, 잘 알고 있는 수험생들 또한,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점 방지용 문제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제파트의 기회비용 변형문제는 수업시간에 누차 강조한 문제이므로 별 무리없이 간단하게 답을 도출하셨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다만, 비교적 평이한 출제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실수로 한 두 문제 틀린 수험생들에게는 표준점수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애매한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이 살짝 불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험점수의 변별력보다는 중요내용을 학습하고 잘 알고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응용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체크하는 수준이므로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동안 온 힘과 노력을 기울이신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조금 부족한 수험생들은 앞으로 개념과 이해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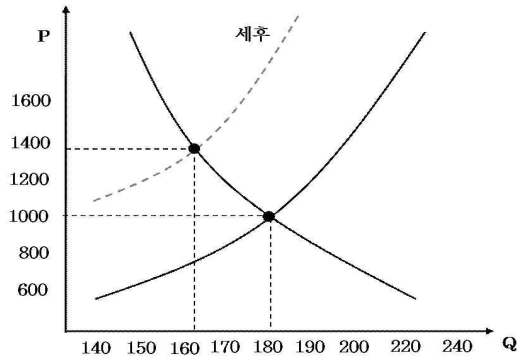
☺ 사회 T 책형 정답 ☺

문항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답	④	①	②	①	③	③	④	②	④	③
문항번호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①	①	②	④	②	③	②	④	③	①



- (가)는 영국의 명예혁명, (나)는 미국의 독립혁명, (다)는 프랑스의 대혁명이다.
 - 권리장전(1689년)을 제출하였다. 권리장전은 1628년에 제출되었으나 왕에 의해 승인되지 않고 있다가 청교도혁명이 일어난 후 승인되었다.
 - 권리장전, 독립선언문, 인권선언문에는 모두 천부인권사상(자연권사상)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 명예혁명 후 최초의 입헌군주제가, 독립혁명 후에는 최초의 민주공화제가 탄생되었다.
 - 독립혁명시절에 독립선언문, 대혁명시절에 바스타유감옥 폭파시키면서 인권선언문이 발표되었다.
-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민주정치제도는 국민투표제,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등이 있다.
- ① 1차개헌에 의하여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되었다.
 - 5차개헌은 최초로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이며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변경하면서 직선제를 채택하였다.
 - 7차개헌은 유신헌법으로 대통령 간선제를 채택하면서 중임제한을 없애 영구집권을 가능케 하였다. 대통령 3선이 처음 허용된 개헌은 6차 개헌이다.
 1980. 8차개헌의 내용으로 전두환의 등장을 위한 개헌이었다.
- ㉠은 투입, ㉡은 산출이다.
 - 정책결정기구에서 오늘날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 있다.
 - 이익집단은 ㉠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
 - 투입과 환류는 민주주의체제에서 활발하다.
- 1인2표제 도입으로 첫째, 대표선출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게 되었고 둘째, 직접 선거원칙에 더욱 충실할 수 있고, 무소속후보를 찍은 표가 전국구의석배분에서 배제되지 않으므로 평등선거 원칙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 가변식 정당명부제의 내용이다.
- A는 독점시장, B는 과점시장, C는 독점적 경쟁시장, D는 완전경쟁시장이다.
 - 과점시장의 특징
 - 독점시장의 특징
 - 완전경쟁시장에서 최적가격형성과 최적생산량만큼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
 - 완전경쟁시장의 공급자는 가격결정력이 전혀 없고 100% 가격순응자이다.

7.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 ① 균형가격은 1,000원이고 균형거래량은 180개이다.
 - ② 공급자는 240개를 팔기 위해서 수요자를 꼬셔야 하는데 수요자를 꼬실 수 있는 가격은 600원보다 낮다.
 - ③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재의 수요량이 증가하고 X재의 수요는 감소해서 가격은 1,000원보다 낮아진다.
 - ④ 물품세를 부과하면 공급량이 가격마다 600원씩 인상된 점에서 형성되므로 공급의 감소를 가져와 균형점이 1,400원인 점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균형거래량이 160개가 되어 20개 줄어든다.
8. A 프로젝트에서 18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B 프로젝트에서 5%로 대출받는 이자가 10만 원이 지출된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상태에서 B 프로젝트의 최저 수익은 목시적 기회비용 18만 원과 명시적 기회비용 10만 원을 합친 총비용 28만 원보다 많거나 최소한 같아야 한다. 그러면 투자금 400만 원에서 7%이상의 수익률이 예상되어야 한다.

9.

	A국	B국	C국
명목 성장률	9.5	11.4	8.1
1인당 실질성장률	0.7	1.7	-5.6

- ① 경제활동인구를 모르기 때문에 실업자 수는 알 수 없다.
 - ② 명목GDP 증가율은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이다. 따라서 B국이 가장 높다.
 - ③ 변화율만 있기 때문에 금액은 알 수 없다.
 - ④ 1인당 실질GDP 증가율은 B국이 가장 높다.
10. 제시문은 수출감소로 인한 외화 공급의 감소를 초래한 것이고 따라서 A는 균형환율의 인상을 나타낸다.
- ①, ②, ④는 원화가치의 상승(원/달러 환율인하)으로 인한 영향이고, ③은 원화가치의 하락(원/달러 환율인상)으로 인한 영향이다.
11. 값은 기능론적 관점, 율은 갈등론적 관점의 계층화이론이다.
- ① 기능론적 관점, ② 사회계층현상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기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이고, 기능론적 관점

- 에서는 계층화가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라고 본다.
- ③ 갈등론에서는 사회계층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혁명과 투쟁같은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④ 차등적 보상체계가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더 많은 분배를 받도록 동기화하게 된다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적 관점이다.
12. (가)는 질문지법을 활용한 실증적 탐구, (나)는 참여관찰법을 활용한 해석적 탐구이다.
가설설정, 개념의 조작적 정의, 법칙발견, 방법론적 일원론은 실증적 탐구에 해당되고,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 심층적 이해는 해석적 탐구에 해당된다.
13. 갑은 사회명목론, 을은 사회실재론의 내용이다.
②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회구성의 원리에 근거한 사회명목론이다.
14. ① A지역의 확대가족비율은 90년에는 0.4%+7.7%+15.2%의 일부(4세대이상가구)이고, 2010년에는 0.7%+4.3%+28.7%의 일부(4세대이상가구)로 되었을 뿐 낮아졌는지, 높아졌는지 말할 수 없다.
② 핵가족은 부부중심가족으로 부부가구와 한 부모와 미혼자녀를 의미한다. 따라서 B지역의 핵가족비율은 72.5%에서 57.6%로 낮아졌다.
③ A지역에서 핵가족비율이 76.7%이고 확대가족 비율은 23.3%보다 작다(1인가구를 빼야 하므로!). 따라서 핵가족 수($5,000 \times 76.7\%$)가 더 많다.
④ 1세대핵가족이란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를 의미한다. 2010년 B지역은 1세대 핵가족 수가 $2,500 \times 14.2\%$ 이고, A지역은 $10,000 \times 11.8\%$ 이므로 B지역이 A지역보다 더 적다.
15. (가) 낙인론, (나) 머튼의 아노미이론에 해당된다.
ㄱ. 낙인론과 차별적 접촉이론은 미시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일탈이론으로 일탈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ㄴ. 낙인론은 일탈행동의 원인을 타인들의 부정적인 반응(낙인)에서 찾는다. 일탈행위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란 어떤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했는가를 중시하는 것으로 ㄴ은 차별적 접촉이론의 내용이다.
ㄷ. 아노미이론으로 목표는 수용하지만 수단은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머튼은 이러한 일탈을 혁신이라고 표현하였다.
ㄹ. (가)는 미시적 관점, (나)는 거시적 관점이다.
16. 제시문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개인의 재산에 특별한 희생을 가하려는 내용이다. 이러한 재산상의 침해에 행정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7. ① 주권의 제약에 대한 조약의 체결·비준, 강화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등 중요한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대통령의 직권으로 체결 가능하다.
② 세계인권선언은 조약의 하나로 비록 체결당사국은 아니더라도 암묵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인정하는 국제법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구속력 즉,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고도의 추상화된 헌법규정의 의미나 내용(적용범위) 등을 해석하는 데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관례이다.
④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것이지, 일체의 전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18. ② 13세의 중학생은 형사책임무능력자로 형벌을 받지 않으나 보호처분의 대상은 된다.
③ 임금은 누구나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된 미성년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19세 미만자는 술,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여기에서 19세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

19.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이라는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피해자는 고의·과실이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존재, 손해발생,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소비자가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법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흐르게 되고 사회정의 구현과 거리가 멀게 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내용을 소비자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제조물이 손해를 유발하였다는 사실과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대법원 판결)

20. ① 알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를 위한 권리로 생명권, 인격권과 더불어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포괄적 권리이다.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 기본권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알권리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포괄적 권리이므로 제한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불가침이지만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③ 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위 제시문의 소송은 항고소송으로 3심제가 적용된다.